

第276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8號

國會事務處

2008年7月22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

附議된案件

-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 1
 -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1
 - o 의사진행의 건 4
-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6
 - o 의사진행의 건 23
-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25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갑 이성현 의원 지역구의 유권자 50여 명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연속 4 일째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10시09분)

○의장 김형오 오늘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이신 강기갑 의

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강기갑입니다. 정부의 추가협상에도 식탁안전과 검역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민심을 애써 호도하고 국민여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쇄고기협상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전면 수용하여 쇄고기 재협상의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쇄고기협상과 같은 정부의 통상독재를 막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협상이 되도록 국회가 정부의 통상 협상을 검증·견제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분야별로 18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쇠고기협상도 한미 FTA 협상의 일부였습니다. 체결된 한미 FTA 협상에는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안에 비준할 가능성도 낮으며 추가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

리가 먼저 철저히 검증하고 불리한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출범 5개월을 맞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파탄, 굴욕적 외교, 무능한 남북문제, 독재를 연상시키는 언론장악 움직임, 80년대식 강경시위진압으로 대변되는 불안한 시국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파탄정책과 같습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주부들은 삼겹살 한 근 사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이 사상 최대입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고용여건도 악화일로입니다. 경제활동 유희인력은 12%, 비경제 활동인구도 1500만이 넘습니다.

가계 빚과 소득 양극화도 더욱 심해져 상하위 임금 격차는 OECD 기준 3위, 남녀 간 임금격차는 1위입니다. 가계수지를 보면 상위 10%는 220만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하위 10%는 44만 원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은 서민들에게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절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747정책, 성장 일변도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달러 약세, 원유 및 식량가격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정부가 물가인상을 부추겼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보육비, 교육비, 전세값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민들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 실용외교, 창조와 미래 등 화려한 수사를 붙여 포장했지만 결과는 굴욕·무능외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를 철저히 외교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한미 쇠고기협상,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 미사여구 뒤에 온 독도 영토권에 대한 도발,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결

과입니다.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역할이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합의를 통해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켜 한반도 비핵화 및 냉전 해소를 향한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더 높은 냉각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불신과 소통 부재의 연속입니다. 남북 간에 합의된 사업들이 중단되고 당국 간 대화 채널도 모두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얽매어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비핵 개방 3000'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날치기로 임명되었습니다. KBS는 정연주 사장과 이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임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들이며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견제해야 될 입법부의 여당들은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짓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전면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추가협상을 해 놓는 관보 게재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애절한 국민의 호소를 저버리고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국민과 대적하겠다는 선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만들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탄압에 골몰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은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하게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국정운영을 일신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서 벗어나십시오.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의 수렴의 국정운영을 할 의지를 표명한다면 원탁회의를 비롯

해 함께 머리를 맞댈 의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기초부터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성장 위주의 경제가 고용, 내수, 시설투자를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절실합니다. 고용을 확대하고 내수를 늘리고 소득과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납품원가 연동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 삼진아웃제 등을 입법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을 통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겠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 인하, 출생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은 대표적인 대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재벌 독점의 경제구조를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한 것으로 백지화시키기를 요구합니다.

52개 특별 물가관리 품목 지정, 한시적 세금 환급 방침 등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실질적 서민대책이 절실합니다.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요금은 서민들의 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애초의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시키는 ‘서민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식량가격이 폭등하자 주요 곡물 생산 국가는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시대에 우리의 대책은 취약합니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세계 7위로 탄소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식량문제, 탈 탄소에너지, 먹거리 안전, 생태 등의 의제가 미래 의제라 말하기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양한 미래 의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미래대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동의하며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에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7대 국회가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차원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코스콤, 기륭전자, 이랜드-홈에버, KTX 승무원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없었을 때 시행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여야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공기업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공기업의 비효율 요인이 소유가 민영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경영이 비효율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경영 공영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영의 정보와 인사를 개방하고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에게 독점된 시장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가고 정부는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수돗물 피담, 의료비 피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과 관광 사업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고 남북 경협과 공동 번영의 상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발전시켜 나가

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난파 직전에 있습니다. 민간인 관광객이 사망한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 간의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18대 국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 수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운영에서 여야 모든 정당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대 국회는 정당 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각 정당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올해로 제헌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헌 초기부터 역사의 굽이 굽이를 돌아 현재 민주주의 실현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국민이 주인이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섬기는 민생정치를 저희 민주노동당이 하겠습니다.

18대 국회를 시작하며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민경제 안정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서민정치, 민생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진행의 건

(10시27분)

○의장 김형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월령 제한을 다 해제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기사 출처로서 바로 이 자료, 작년 11월 17일 총리가 주재한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7월 16일 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 한 200건 가까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1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료만 어제 밤에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말하자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을 인용해서 오늘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만 우리에게 쥐 가지고 여야 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한 지가 물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시다마는 5월 청문회 때부터 따지면 자료 준비 기간은 무려 2개월이 넘습니다. 또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합의한 걸로 따지면 20일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 1건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료만 먼저 주십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에서 총리 주재로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각제 국가가 아닙니다. 총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각제 국가가 아니라 결국 모든 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 달 일주일 뒤인 1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부와 청와대의 모든…… 총리, 부총리, 관계 장관들과 비서실장, 정책실장들을 모두 부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의견 개진을 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쇠고기를 먼저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쇠고기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간에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했던 것인지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쇠고기는 FTA보다 먼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FTA는 미국 의회가 처리할 문제인데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다 FTA에 대해서는 선거 전까지는 우호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듣고서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수궁하는 분위기였다고 배석했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리고 총리실이 이렇게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 그만두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있었던 작년 3월 29일자 통화기록 그리고 금년 6월 7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통화기록 전부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의 이미 결정된 것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그대로 설거지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쇠고기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려고 한 것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여야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기 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승수 국민총리 이하 부처 국무위원들에게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다음은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40여 일 공전 보내

고 어렵게 의사일정에 합의해서 오늘로서 이제 4일째 민생과 쇠고기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조선의원으로서 이제 3일을 지켜보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또 야당이 요구해서 실시한 민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안에 관한 국무위원의 답변을 충실히 듣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국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법은 그래서 국회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위원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3일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국무위원의 답변을 가로막거나 또 인격적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무위원의 답변을 억박지르거나 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충실하게 국민의 대표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은 사실과 또 진실에 정의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일째 우리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사실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민은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억박지르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차근차근하고 조용하게 정말 내실 있는 긴급현안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대 국회의 처음 의사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국회, 더 달라진 국회, 정말 국민이 희망을 갖는 그런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조선의원으로서 3일째 지켜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18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의사진행발언, 두 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당일 회의에서 안전 처리 과정이나 회의 진행 과정 등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입니다. 어느 것이 의사진행이고 어느 것이 의사진행이 아닌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긴급현안질문과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으로 전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장은 국회법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10시36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4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균 의원 민주당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저는 오늘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 커녕 4%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60만 개는커녕 20만 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난 노무현 정

부 때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가 5개월밖에 채 안 됐고 또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해외요인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경제 성과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봉균 의원 저는 사실……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이나 고용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특히 물가 상승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유가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3.1%였습니다.

○강봉균 의원 자, 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성장률은 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 들여서 경제 운영을 철저히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 전 정부의 1차연도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내년도도 별로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나 일자리 창출이 차질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금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값이라든가 곡물……

○강봉균 의원 원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제가 좀…… 곡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해외요인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상승은 저희뿐만 아니라 EC라든가 일본의 경우도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제 여건이 저희들에

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보다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먼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지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 동안 흑자 행진을 계속해 오던 경상수지는 금년에 드디어 적자로 반전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순 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상품 수지는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서비스 쪽에서 적자가 커지고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관리를 잘 하고 수출을 늘리고 함으로써 경상수지가 흑자로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만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강봉균 의원** 총리께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그것을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달렸겠지요. 만일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의견들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엇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뭔가 지난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운영이 조금 더 미진하지 않았는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운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봉균 의원** 아니,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말도 시인을 못 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7.5%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게 4%로 내려갔거든요. 성장잠재력이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은 경제 잠재력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강봉균 의원**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 때도……

○**국무총리 한승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강봉균 의원**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5%가 됐어요.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장내 소란)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이지요……

○**의장 김형오** 잠깐만, 총리!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우리 강봉균 의원께서도 질문을 좀 중지해 주시고.

지금 장내 소란으로 이렇게 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이것은 장내 소란이 아니고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총리께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니요! 의장께서 이것은 총리한테 주의를 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장내 소란이 그래서 생긴 건데 의원들 질책하시면 됩니까? 총리에게 주의를 주세요! 총리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의장님.)

(○주호영 의원 단하에서 — 질문하는 의원들께서도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답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혼자서만 말씀하시……)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질문하는

의원한테 총리가 어떻게, 번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라니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주의 주십시오!)

자, 서갑원 의원, 주호영 의원!

자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법상에 대정부질문 제도는 의원의 질문시간을 10분 또는 15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과 국무위원 간에 질문과 답변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한 보장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답변권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서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의원 여러분……

강봉균 의원 질문 계속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강봉균 의원 계세요, 계세요.

○의장 김형오 자, 회의진행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강봉균 의원 총리,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답변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하는 답변이 질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핵심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의 기본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이 저는 이른바 747 대선공약이라는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면 대통령께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747 공약은 선거용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무리한 거다, 그래서 이 제도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뭐 아시다시피 747의 맨 앞 7은 잠재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 소란)

(「말을 못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미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급속하게 해외 요인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 기조로 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747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가안정이 되고 국민 경제가 안정되는 대로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봉균 의원 그런데 답변을 정말 정확히 안 해 주시는데요.

747의 7%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이 아니고 매년 평균 7%씩 성장해서 소득이 4만 불이 나오는 연도까지 계산해 낸 숫자가 7%인데……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그렇습니다.

○강봉균 의원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경제 안정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성장잠재력이 없이 그냥 7%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는 그 잠재력을 키움으로써 국민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닦겠다 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물론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해외 요인은 우리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올바르게 않으면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 경제성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해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경제 의욕을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통 분담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과 정부 간의 고통 분담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각급 정부기관이 나라살림을 절약하겠다고 예산절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방에서는 각종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과 모든 공익단체 등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들은 경상 예산을 10% 정도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의 그와 같은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예산의 10%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정부 등과도 협의의 통해서 공공부문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지금 말씀하신 10% 절감한다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008년 것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그걸 언제 발표를 했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들이 지난해에 발표했습니다.

○**강봉균 의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들 간의 고통분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정부 3자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통분담 원칙을 이끌어 낼 자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중소기업은 우리 국민경제의 주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되기가 힘든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이나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

과 같이 중소기업이 적절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저는 이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과 사료값이 폭등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미 FTA 후속대책을 보완해서 농민들을 긴급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 곡물가가 급격히 인상을 하고 비료값이라든가 사료값이 급등해서 우리 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가의 비료나 사료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FTA 관계는 FTA가 발효 시에 시행될 예정인 FTA 보완대책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제가 물어볼 힘이 안 나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도 아니고 에너지 위기도 아닌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농어민들만 지금 죽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물가는 얼마나 더 오를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주가나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경제 불안심리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뚜렷한 비전과 철학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하루속히 제거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국제여건의 악화로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고유가 종합대책 같은 것을 발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편의를, 또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부가 시작한 지가 5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하는 것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어려운 난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봉균 의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747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지금 한 총리께서는 정말 대통령의 심기나 편하게 해 드리고 의전총리 역할이나 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관리내각을 이끌어갈 책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장관께서는 지금 시중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제는 대학교수들 100여 명이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살리기에, 더 일을 잘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환율정책만 하더라도 이 747공약을 뒷받침하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환율을 떨어뜨리는 시장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제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강 장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정부는 환율뿐만 아니고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한 번도 어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첫째 경제의 기초여건 그다음에는 국제수지 그다음에는 주요국의 환율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의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런 환율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원래 올해 들어와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정 하에서 4, 5월부터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가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오히려 고환율을 부추겼다기보다는 그런 환율의 쏠림현상을, 올라가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강봉균 의원 지금 한국의 인플레이 현상을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이른바 코스트 푸시(cost-push) 인플레이로 보는지 아니면 우리 소비자나 투자과열로 인한 디맨드 풀(demand-pull) 인플레이로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지금 현재 인플레이는 거의 50% 가까이 코스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글썄요, 그런데 지금 확일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금융긴축정책을 쓰면 처방이 좀 잘못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확일적인 금융긴축정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고요, 특정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문적인 데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여신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봉균 의원 경제팀은 나라살림을 절약 집행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10년을 앞당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예산지원에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는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공기업 개혁을 하는 이런 모순된 일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건의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공기업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사 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강봉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문희상** 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鎭衡 議員**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15대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단상에 와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는데 원구성조차 못한 상태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국정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미숙을 국정 전반을 망쳐 놓은 것처럼 정권퇴진 운운하면서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선동하는 것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안정된 자리를 잡고 나서 잘못할 때 탓해야지, 헨들을 잡아마자 흔들어 대는 것이 무엇을 시험하자는 것인지 모

르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인 불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어떤 분은 월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었는데 요즘은 2000만 원도 못 올린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슈퍼마켓이 13만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2만 5000여 개가 속해 있는 한국슈퍼마켓협회의 말을 들어 보면 매월 400여 개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불안마저 심한 상태라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 1600여 명에게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8.3%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중소기업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GM대우 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노사 문제가 아닌 타이어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한 탓입니다. 타이어 납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고, GM대우자동차공장은 계약한 단가대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사회 불안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상 유례 없는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살리기의 첩경이 민생에서 출발한다는 심경으로 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물가, 경상수지, 고용,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고용, 성장률, 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걱정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위축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이런 것들의, 대외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차·2차 석유위기 때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낸 것처럼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번에 닦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趙鎭衡 議員** ‘삼인언이성호(三人言而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얘기하게 되면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기설이 난무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요즘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위기설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9월 위기설은 아마 외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외환보유액이 외채 대비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환위기 초기의 97년, 8년과는 아주 완전히 경제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기설에 대해서 믿지도 않거니와 이와 같은 위기설이 하루속히 걷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趙鎭衡 議員**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趙鎭衡 議員**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5%나 올랐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6월 26일 날 경총 주최 경총포럼 강연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맞습니다.

○**趙鎭衡 議員** 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조건일 때는 4.8%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5% 인상이나 가스요금의 30~50%를 8월 중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로 나타나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임금 인상 요구를 받게 되고 서민경제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기를 늦추거나 안 올리거나 할 의사는, 어떠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고유가 기세가 조금 꺾이는 기미가 있고 해서 이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은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또 분산해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요율과, 또 상대적 요율의 인상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趙鎭衡 議員** 다음,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1610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약 22만 6000명, 노점상까지 하면 한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혹시 장관께서 재래시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화요일에 가봤습니다.

○**趙鎭衡 議員** 저도 그저께 일요일날 가 보니까 한 달에 5, 6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파출부 나가면 어떡냐?’ 이런 얘기도 해 봤더니 파출부도 젊고 또 좀 괜찮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 여기서 2, 30년간 생활해 왔는데 파출부 써주지를 않는다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해야 유지될 터인데 능력들이 대개 부족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이라서 자신들을 한탄만하고 자구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회에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국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재래시장의 침체는 저희들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예산이 약 9000억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위기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재래시장 등 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국민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趙鎭衡 議員** 중요한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적어도 웬만한 자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줘야만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도 그 투자를 해서 좋은 자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내에도 캐노피 공사해 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좀 잘 시켜 줘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역할로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하여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그러한 의견이십니다.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매년 중·대형 시장에 70개씩의 주차장 설치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2007년 말로 43%입니다. 이것을 2012년까지는 70%까지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자들이 카트에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바닥재 시설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재래시장에서도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바닥공사 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상인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현재 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금년에만 약 32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상인대학 정보화교육 해외연수 워크숍 등 상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약 3만 7000명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상파와 유선 TV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趙鎭衡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시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趙鎭衡 議員** 중소 건설업체 부도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180여 개가 부도가 나서 약 43%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중소 건설업체 부도 대책을 비롯해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존경하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여러 가지 건설이나 SOC 투자를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좀 건설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어떻게든 해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6월 11일 날 1차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가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원가에 반영해 주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건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趙鎭衡 議員**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낙찰제는 중소 건설업체 부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유보를 좀 해주시고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경쟁 촉진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최저가낙찰제로 확대하는 방안은 세워 갖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좀 연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趙鎭衡 議員** 좋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조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문순입니다.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정권퇴진 요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도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못마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사장을

곧 해임한다. 먼저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고 그러면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의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의 방송전략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KBS 사장에게 가해진 비신사적이고 인격 모욕을 포함하는 퇴진 압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면직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5월 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 또 5월 12일에는 종로 구세군 회관 부근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사장의 즉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퇴진이 아닌 것은 정권의 항복 또는 굴복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우익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나섰습니다.

류우익 비서실장은 김금수 이사장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특사는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특사 역시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에게는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이 같은 압력과 제안들을 거부하고 KBS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곳이 교육부입니다.

KBS 이사 중에 신태섭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 3월부터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4월 29일 신태섭 이사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으로부터 '사퇴 안 하면 교육부 감사가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건널 수 없다' 5월 7일에는 총장으로부터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답해야 한다. 내일까지 답하라. 더 만날 일이 없다. 이건 최후통첩이다' 여기서 차관이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차관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 15일 총장이 ‘당신 사퇴 안 하면 종합감사가 들어온다. 종합감사가 들어오면 학교 존립이 위태롭다. 이번 사태가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 5월 16일을 말합니다. ‘내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묻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교육부가 아닌 곳, 동의대 총장이 말할 수 없는 그곳, 그곳을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신태섭 교수는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나섰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셨으면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사장에게 다섯 차례의 소환장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는 검찰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통상의 절차라면 이럴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뜻하는 것이죠?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부분도 검찰에서 적의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강제구인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순 의원** 대개 통상의 절차라면 구인장을 한 3~4회 보내면 그다음에는 강제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을 강제 구인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거듭 말씀 올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문순 의원** 그렇다면 기소할 생각이신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기소 여부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방침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을 정당하게 해명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문순 의원** 이 사건을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국세청과 KBS가 세금 소송이 붙었습니다. 당시 판사가 주도를 해서 두 기관의 중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두 판사에 중재하는 것이 좋다고 자문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성립되고 판결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문제로 KBS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유는 끝까지 소송을 했으면 이것을 텐데 중도에 합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배임이라면 당시의 판사, 서울지방국세청장,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율촌이 배임공범이 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사건은 KBS 전 세무담당 직원이 KBS 사장을—내부고발입니다—고발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다른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국세청장 또 법무법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범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논리가 비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문순 의원** 그 사안은 판사가 주도를 한 것이고 KBS 사장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배임이 된다면 판사가 주범이 되고 KBS 사장은 종범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것은 법률이론상 조정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이 배임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는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이 어떠했느냐, 또 그 조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으로 이 조정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봐야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문순 의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KBS 사장이 그 모든 사람들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 아십니까? 그래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도 좀 소환에 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주변 조사는 하셨습니까? 왜 KBS 사장에게만 유독 다섯 번씩 소환을……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BS 사장은 아직 조사를 못 했지만 관계되는 국세청 직원이나 법무법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 왔고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문순 의원** 당시 판사는 아직도 현직 판사로 계십니까? 조사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검찰이 적의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문순 의원** 대답이, 올바르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에 의한 법의 부정, 법의 자기부정, 자기모순, 자기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PD수첩'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의 문제는 언론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감사원과 국세청도 나섰습니다. 여러 군데 권력기관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서로 자료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권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직접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 통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YTN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폭력을 동원해서 사적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3년 전에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MBC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혹독한 고통과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사

를 퍼부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인신의 피해가 우려돼서 경호를 붙여야 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제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손 노모까지 밖에 나가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진실이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저희들을 공격한 언론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과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고소·고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등입니다.

저는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에게 피해가 컸지만 그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도 중요하지만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언론자유란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의회조차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최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고물가와 공기업 선진화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어긋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 한 분 한 분이 주제에 어긋난 발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이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질문은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현안 질문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문순 의원은 특정 방송언론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 소란)

가장, 대의민주주의 의회인 이 자리에서 회의

진행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조용히 하세요!

(「왜 동료 의원을 폄하해요?」 하는 의원 있음)

내 발언이니까 발언권 얻고……

(「의제 외의 발언을 하니깐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진행대로 발언만 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님, 발언을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부의장 문희상** 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김성태 의원** 최문순 의원이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입성한 것은 특정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성했습니까?

(「대정부질문에 맞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유가·고물가에 대한 민생 현안 질문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준비해 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발언……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의장님, 주의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문희상** 김성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대정부 질문해 주세요.

(「그럼 뭐 하러 국회를 와, 정부 가지.」 하는 의원 있음)

(「정부 대변인이야, 지금? 정부를 비판해야지 동료 의원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성태 의원** 오늘 의사진행에 맞는 발언만 했으면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헌신적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 부분

에 대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 내보내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생생한 민생 현장의 소리를 총리께서도 자막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정부는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오는 8월 중에 인상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 인상은 눈치만 보고 있던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값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공공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실행되는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에 이어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6월 말 현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고통지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고유가 등의 국제적 흐름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한 것인데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 독도 문제로 일본에 열 받고 경제적 고통지수는 일본 국민들보다 앞서서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논의 흐름과 연동해서 유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는 동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가가 작년 이맘 때에 비해서 2배나 올랐는데도 계속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라든가 가스는 일정 수준까지 현실화가 사실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

다.

다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한 이와 같은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시기 분산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שא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유가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 속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기업 선진화 목적은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계의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할까 합니다. 재계는 올초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95조 원 투자와 8만 명 신규채용을 약속했으나 상반기 고유가 등 대내외 환경 불안을 이유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가 초기에 감세라든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로 투자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급상승하고 국내경기 또 해외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욕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대기업이 1사 10% 추가 고용이라든가 중소기업도 1사 1인 추가 고용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

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좀더 투자에 적극성을 띠겠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노동부 산하의 전국 84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사항으로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일본,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 역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업무처리와 지원이 필요한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방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지금 거론하셨는데 이 고용지원센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노사관련단체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 20만 명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20만 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경제가 1% 성장하면 6만 명 내지 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경제성장 하에서도 일자리가 좀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안정종합대책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2, 3단계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여력이 있는 일자리를 좀 늘려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1사 1인 또 1사 10% 채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부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업이 채용하는 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특히 인턴직원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한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유가·고물가 대책 속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과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이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여겨시는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고를 회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종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좀더 확대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지방 이양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운용은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국가의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예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업알선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국가의 기본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 업무는 국가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를 보며)

표는 2008년 7월 현재 분규사업장 현황입니다.

장관에 취임하시고 노사화합을 위해서 분규사업장에 직접 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분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이 직접 분규사업장에 나간다는 것은 분규 해결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분쟁 해결에 장관이 나선다든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직접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 이하 관리들이 항상 분쟁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을 너무 보기 힘들다는 그런 노동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돌면서 고용 안정과 노사관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어떻게 하든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또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제대로 고쳐 나가고 또 동시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과 항상 여러 가지 폭넓은 대화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시다마는 정부의 경제안정 종합대책의 세부 실천전략들은 정확한 효과의 예측하에서 계획·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성장잠재력 확충 이렇게 네 가지를 큰 줄기로 해서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시적인 정책으로 꾸며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특히 최근 어제 아래 보도에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석유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유가 대책에 따르는 추경예산 그다음에 세법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장잠재력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짜여졌습니다.

○**김성태 의원**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의 세부 방향으로 민영화, 그리고 민간영역과의 경합관계 해소, 경영효율화 등 세 가지로 나눠져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이윤 극대화를 통한 수익적 민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공익적 민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꼭 수익적 기준하에서 두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기준, 두 가지 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 예를 들면 현재 대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공기업은 바로 민영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데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기능이 끝난 데 대해서는 기능을 조정하는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현재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그다음에는 현재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해서 공기업으로 존치해야 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의원** 정부는 지난 6월 중순에 전기 가스 물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밝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확실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성태 의원** 과거 공기업 민영화 이후 공적 의무는 면제받고 사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서 경영 효율화 논리가 공적 서비스의 가치를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점을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쟁자 없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받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과 판매망, 소비자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민영화된 공기업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IMF 시절 영겁결에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적 채무 유효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주된 골격도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제도적 보완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기본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김 의원님의 인식과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민영화를 할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민영화를 하는 경우도 이러한 독점이 서민계층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을 그리고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한 이후에도 필요한 통제장치, 가격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그러한 통제장치는 앞으로도 갖고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접근권에 대한 보장장치는 확실히 마련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품·소재산업 유치를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의 독도와 연계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안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까지 저의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웅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변웅전입니다.

민생현안질문에 앞서서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 질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8대 국회부터는 조용하고 또 질서 있는 신성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님들 중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야당석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마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이나 국무위원 답변도 그렇고……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 최영희 의원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다선·중진 의원이지자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께서 이곳 의사당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점잖은 처신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득 의원 위치에서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시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 다르게 들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대통령 형으로서 더욱 자중 자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폭탄으로 서해안 일대가 검은 재앙을 입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충돌해서 무려 6만 3000드림의 기름이 태안 앞바다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이 나라의 자원봉사자 120만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위대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 현장에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지, 오늘까지 한 번도 다녀가시지를 앓았습니다. 총리께서는 한 차례, 단 몇 시간 동안 사진 찍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피해 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5일 동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고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우리나라 총리와, 비교하는 절규하는 우리 피해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돌아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총리께서는 행보가 잘 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한승수 총리께서는 의원 생활도 하셨고 총리로 계신데, 현장에서 얼마 동안 계시다 가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태안 현장에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하

루 종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현지 주민들과 또 만나서 사후 대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이라도 가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20만 명이 넘게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자도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변웅전 의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반만큼만 일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월 6일 날 10시 30분에 해경에 오셔서 약 1시간 동안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동안 자원봉사 하시고 사진 찍고 20분 동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점심 식사 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을 원하신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종일 하지 못하고 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웅전 의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앞에 촛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민들은 오직 한 가닥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을 하늘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변웅전 의원 지금 몇 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변웅전 의원 특별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몇 번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변웅전 의원 지금 태안의 기름 피해 사건이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계신 총리께서 ‘언제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된다’, 지금 그러한 답변 태도를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질문할 때 ‘소상한 것은 실무자인 차관에게 묻고, 정책적인 것만 총리에게 물어라’ 이런 망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 주시고, 또 우리 7만 태안 군민과 서산 그리고 보령, 서천, 서해안·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 했는지 알아본다니요?

정확히 말해서 6월 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변웅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총리는 사실은 태안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의 유류 사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총리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태안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중요한 정책을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아마 변 의원님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 제가 평소에 한승수 의원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심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데요, 4700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13억 인구의 원자바오 총리, 누가 더 바쁘시겠습니까? 바쁜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재앙인데, 우리 태안 군민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회장은 ‘이 한 몸 죽어서 우리 동리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면 목숨을 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진압을 잘하는데 폭동 진압,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먼저 하세요. 큰일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7월 22일 12시 1분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는 이 정부에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기억해 주시

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날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발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웅전 의원** 그러면 총리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상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의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태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조치를 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의원님께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웅전 의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변웅전 의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7만 태안 군민이, 23만 서산 시민이 또 보령 시민이, 서천 시민이 서해안 일대, 남해안 일대에 다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액 조차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변웅전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에서는 1172억 원을 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했고 200억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생계안정자금의 내역은 정부에서 768억, 충남 지방비로 150억, 그리고 국민성금으로 254억이 총당 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 총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함

니다.

제가 여쭙어 본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 조사액이 얼마인가를 물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변웅전 의원 대한민국 정부는 꼭 이번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IOPC 같은 데 끌려 다니지 마시고, 촛불집회의 쇠고기, 끌려 다니지 마시고, 독도 문제, 일본 수상에게 끌려 다니지 마시고 똑바로 정책을 이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물어야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피해액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총리께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가족들과 함께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CF 모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자기의 이미지와 공익에 이바지되지 않는 CF는 억만금을 줘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익에 부합되는 것은 무료로도 나오는 것이 인기 연예인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국 국무총리의 선전이 방송될 때 미국의 록키산맥 자락의 많은 주에 사는 소목장 주인과 많은 소목장의 관련단체가 '빅 빅토리(big victory)' '큰 승리다' '환상적 승리'라고 환호와 박수를 칠 때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살농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해안 유류피해민을 살려 주시고,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해액을 빨리 조사해서 보상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폭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폭동

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집권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변웅전 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진행의 건

○의장 김형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議員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밖에서 보는 국회와 안에서 보는 국회에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저희가 현안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질문이 과연 연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안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답변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함이 왔다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또는 답변을 하는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현안질문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안질문의 범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현안의 주제와 관계없는 KBS에 관한 주제가 있다든지 또는 너무 한 지역구에 국한된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도 또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다음은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의원 민주당 충북 청주 출신 노영민 의원입니다.

오전 강봉균 의원의 질문 시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 소란이 일어났는지 제가 속기록을 한번 들춰 보았습니다.

“대선 공약 시 약속했던 경제성장률 그리고 약속했던 일자리에 비해서 현재 현저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인정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하면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답변은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산증과 서민의 고통,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 불안 증폭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물었습니다.

답변, 역시 동문서답 수준이었습니다.

답변은 질문에 답변하라는 것이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의원들이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는 어처구니없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총리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47의 7은 잠재성장률이다”, 이것은 아마 변명으로 답변을 일관하다 보니 나온 실수 같습니다. 총리께서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한번 ‘747 공약’을 쳐 보십시오. 그 수많은 카페글, 블로그, 게시판, 신지식, 뉴스, 전문지식, 웹문서 어디에도 747의 7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불안심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세계 금융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발언 그리고 6월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조짐, 구조적 위기의 대지진 발언 등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총리 답변 역시 영똥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압적인 답변 태도,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 동문서답에 버금가는, 그리고 변명이 지나쳐서 허위사실까지 얘기하는 답변, 이러한 총리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당연히 엄한 주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의장은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당적 보유 금지 조항까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위에 손상이 생기면 그것은 국회의장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부 전체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YTN ‘돌발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후에 의장께서 보인 행동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의장이 보인 행동을 비교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후 한나라당 의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잘했어.” 하셨습니다. 그다음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지는 않았지만 박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박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중립적 회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총리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이용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꼭 해야겠다는 그러한 소신이 있으신 분은 국무위원과의 질문 응답을 통해서 다른 입장을 개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동료 이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 답변을 거론하셔서 이것을 비판하시는 행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다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제도 자문기구가 열리고 여기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제도의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원고 내용이 국무위원들에게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아마 답변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고 따로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14시25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찬탈 야욕에 이은 북한군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만행 때문에 온 국민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 경제는 두 갈래의 수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유가 충격이 물가 폭등으로 확대되고, 물가 폭등이 임금 인상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감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물가 충격에 따른 긴축 및 고금리 정책에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는 계속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자금난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보다는 확실히 경제를 더 잘 챙길 것으로 믿고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보내 줬는데도 실상은 그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물가,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대외 채무, 설비 투자, 모든 것이 예상 같지 않고 순조롭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지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가 지난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때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라는 지금 투자, 소비, 일자리, 경상수지, 모든 점에 있어서 수출만 제외하고는 IMF 전과 유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IMF와 같은 그런 위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최근과 같이 선진국발 금융 위기나 살인적 오일 쇼크, 수입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한꺼번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 칸 총재는 지금의 유가에 따른 세계적인 위기는 21세기 들어와서 첫 경제 위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 위기설과 유가 폭등 등 외부로부터 한꺼번에 들이닥친 환란의 뗏에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도 외부 여건의 호전 없이 우리 경제 스스로 외환에 의한 내우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이켜 보건대 본 의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의 IMF 환란 극복을 두고 최단시일의 IMF 졸업이라고 좋아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미국, 영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230억불에 달하는 초단기 외채를 중장기로 전환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경제가 그렇게 빨리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당시 1997년에 외국 전문기관들은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97년의 경제 위기는 사실상 유동성 위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고 지금의 어려운 점은 유동성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에 물가는 올라가는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회복하기가 더, 옛날 97년, 98년 같이 그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식 의원** 장관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세계 경제는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 의장인 버냉키조차도 최근 주요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의 고유가 충격에 허약한 체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주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식 의원**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GDP 1000불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일본의 3.3배, 미국의 1.7배나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꾸준히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 온 반면 IMF를 성공적으로 졸업했다는 과거 우리 정부는 10년 동안 경제 체질 다지는 일을 소홀히 해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44%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현재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7월 현재 석유공사의 직접 구입 비축량은 약 7600만 배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비축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1120만 배럴쯤 됩니다.

○**배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석유공사의 원유 도입 시 대금 지급은 언제 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대개 원유 도입 계약을 통해서 물량과 인도 시점을 결정하고, 인도 시점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은 계약 후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입니다.

다만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헤징을 통해서 인도 시점의 가격을 미리 확정하는데 2004년이나 2006년에 구입한 경우에는 헤징을 실시했습니다.

○**배영식 의원** 현재 비축기지에 비축가능용량 대비 어느 정도의 원유가 비축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정부 비축유는 실제 55% 수준이고 국제 공동비축 계약물량까지 포함하면 충유율은 약 81%로 볼 수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계약 후 1년 뒤에 현물을 인도받으면서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니까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비축기지에 외국사 비축분을 보관해 주고 보관수수료

만 받고 있다는 것은 비축기지 운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국가 비축분 원유 도입 방식, 비축기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유공사가 비축유를 구입하면서 계약 후 1년 뒤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가 예측 기관이 계약 시점보다 1년 후의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2003년과 2007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6년은 해정을 실시했고 2005년에는 원유 도입이, 그때 비축유 구입이 없었습니다.

비축유를 경제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가 예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보장 등을 통해서 유가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가 예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해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도 시점의 가격을 확정하여 비축유를 구입하는 그러한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배영식 의원** 그런데 국민들은 동 대책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월 2만 원 수준의 유가환급금으로는 생색만 냈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월 2만 원으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정부로서는 재원을 충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서민 가게 입장에서는 월 2만 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월 2만 원은 서민 입장에서 볼 때 한 달 대중교통요금에 4만 원 정도…… 버스를 타면 4

만 원 정도가 출퇴근이 되는데 그 50% 정도 되니까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월 2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가장 적은 금액은 300불에서 600불, 우리로 치면 한 30만 원의 보조금을 연간으로 주었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할 때도 우리가 소득수준에서는 크게 낮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국민들은 그 대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 뒤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정작 서민들의 아픔은 폭등하는 물가입니다.

물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요 생필품을 품목별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10년이나 20년 전의 정부 주도 물가관리 방식을 도입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해가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 부족이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52개 품목을 한 이유는 현재 소비자 물가품목이 400여 개 되고, 생활물가지수로 해서 150여 개의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라면이라든지 많이 쓰는, 소주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서 우리가 그 동향을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올해 82개 품목 대부분을 취했습니다마는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근에 와서는 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또 인하를 해서 밀가루 가격이 인하가 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70년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70년대식의 대책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배영식 의원** 시장은 항상 냉정합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맞설 때 역사는 항상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7월 2일 2008년도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방향을 당초의 성장 기조에서 안정화 기조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7% 성장률 목표도 지난 3월의 6% 내외에서 다시 4%대로 후퇴시킨 것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선진국은 국가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직접적으로 예고하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이나 예측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굳이 정부의 목표수치를 미리 발표해 놓고 그 수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저도 기획재정부 올 때 제일 먼저 그런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 주도 경제 개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가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예측치라도 또 전망치라도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당분간은 전망치라도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빨리 정부가 성장률을 제시한다든지 전망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다음, 기획재정부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배영식 의원** 장관께서 하신 발언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장관의 입장 표명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면 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렇게 많은, 제 발언이 들쭉날쭉했고 또 거칠었다고 그렇게 이해된 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깊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은 문제가 된 환율 발언은 3월 25일,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3월 25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발언과 저의 발언이 대비되거나 그렇게 해서 자주 한 것으로 됐는데……

사실 3월 25일 제가 한 것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환율을 담당하는 장관은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수지, 경상수지 적자 기

조가 지난 12월 이후 3개월째 지속되는 것을 보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명하지 않은가’ 이런 식의 반문형으로 한 것 이외에는 제가 환율에 대한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은 책에 환율에 대한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과 그런 것을 소상히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라는 실제로는 3월 25일 한 번 외에는 직접 환율 수준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총 수장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의하십시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개월째 상당수 공기업의 기관장이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임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렇게 하니까 통솔력과 업무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앞으로 제도개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의로 만든 제도입니다라는 운영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관리에 관련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배영식 의원** 또한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의 보호를 위해 투기자본이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황금주제도나 포이즌 필과 같은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황금주 문제라든지 포

이른 필 문제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상법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시장경제주의 원칙과 상치되는 면이 있고 또 황금주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공기업 민영화, 영국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아직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배영식 의원**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과거 정부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심각한 편중 투자를 강행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수치로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제가 지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정책에 대하여 민심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발전 정책을 내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소외되었다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호남을 잇는 낙동강과 영산강을 대운하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영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 다짐만 받겠습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지원과 보호에서 경쟁으로 바꾸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난, 모든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제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온 이후에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잘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의 중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저희들이 다짐했습니다.

○**배영식 의원** 앞으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온 신명을 바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우리는 고시 동기입니다. 저한테 맹세를 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약속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풍요를 안겨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노사 화합, 정치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규제 완화와 개방화 및 체질 개선으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을 든든히 다져야 합니다. GDP 4만 달러 시대의 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고통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시련을 도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힘을 다시 뭉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종혁 의원의 소개로 부산진구의 지역구민 등 100여 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성공 시대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 국민에게 공언했던 747 공약 대신 7%의 고물가, 4%의 저성장, 7%의 고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국민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어려우시겠지만, 총리께 몇 말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가계 지출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 35조 못지않게 사교육비도 사실상 30조가 들어가는데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현 정부가 그간에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해 가지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학원 등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교육비 문제는 이게 교육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사회·문화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학부모들한테는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 사사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고 OECD 선진국 평균이 20명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30명에서부터 40명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 마포, 은평이 있

는 서부교육청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40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가능한 한 하여튼 공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공교육이, 공공 학교들이 자사고 못지않게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육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굉장한, 막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그런 측면에서 자사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 대신에 공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 예산을 선진국들처럼 공교육 예산을 현재 4%대에서 6, 7%대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여튼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학습 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복지 개발의 확충을 위해서 국민이 만족하는 그와 같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영국의 신임 고든 총리는 공교육 예산을 7%에서 다시 3%포인트를 늘려서 10%를 쓰겠다고 합니다. 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공교육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께서도 우리나라에 우열반 편성을 하고 0교시 수업을 하는 입시 경쟁식 교육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최소한 교육에 관해서는 우수한 공교육을 고루 제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문국현 의원님께서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이와 같은 정치를 추진하신 데 대해서 저희는 존경을 항상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교육계에 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아주 올바른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교육 예산이 6%대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압니다.

○문국현 의원 투표율이 10%대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 정책 토론이라든가 또 투표 당일에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유권자의 참여를 가능한 한 높게 해 가지고 교육감 투표의 의의를 높이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절감하신다면 투표율 50% 목표를 놓고 전 국무위원들께서 한번 자리를 내놓고 국민들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추세로 봐서 투표율 50%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투표율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문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고 또 교육에서 점하는 교육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투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지금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 이유는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립대학도 400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대책이 됩니까? 이분들한테 후불제 같은 거라든가 대학등록금 자체가 늘지 않도록 상한제를 좀더 조기에 채택할 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등록금상한제 도입 문제는 대학자율화, 이 정부에서는 대학자율화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와 좀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등록금후불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이런 교육예산을 늘린다고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운

하는 분명히 안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 기획재정부장관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그 조건 없이 안 하시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제가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할 리가 없습니다.

○문국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장관님께 다음은 여쭙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돈을 꾸보신 적 있으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문국현 의원 돈을 꾸서…… 은행이나 이런 다른 사람한테 꾸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자는 대개 얼마 내셨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옛날 처음 집 살 때 돈 꾸서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국현 의원 이자는 얼마 내셨나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으로 거의…… 은행이 아닌데, 은행은 십사오% 정도가 되었고 제2금융권은 제 기억으로 18%, 즉 20%가량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요즘은 돈을 전혀 안 꾸셔서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자상한제가 몇 %인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지난번에 내려서 49%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49% 이자를 낸다면 지금 1억 원 꾸면 연말까지는, 아니면 미리 댄다면 4900만 원을 내셔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겠지요.

○문국현 의원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사채 문제, 금리 그 문제는 제가 옛날 실무자인 과장 시절에도 그 분야의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참 쉽게 판단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그러나 서민을 살리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어야지 IMF 이전만

해도 25%였던 거를 오히려 약자한테 더 많이 받아서 강자한테 적은 이자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저는 그 부분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문 의원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보신다면 제가 옛날에 일수놀이라고 하는 사채금리를 100% 정도 되었을 때 그것을 70%, 50%로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런 사채를 쓰는 사람은 부모형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좌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 달에 금리가 100%라 하더라도 오늘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채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계층에 따라서 다…… 어떤 사람은 금리가 높아도 오늘 내가 좌판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형제의 보증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의,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채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국현 의원** 선진국의 예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는 20%까지, IMF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사금융 이용자들의 85%가 최초 1000만 원만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700만 명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데 장관님 계획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2000억의 출자를 해서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뱅크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아까 말씀대로 1000만 원 정도도 사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 원의 돈만 빌려도 생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2% 정도로 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

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700만 금융소외층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비정규직 근로자가 858만 명이 돼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실상의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책은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파악 기준을 마련한 그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약 564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더 검토를 해서 확정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양분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용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선 시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 비정규직의 상당한 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정규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정규직이 경직화됨으로 해서 기업이 정규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 비정규직이 오늘날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지금 스웨덴 금속노조의 스테판 뢰펜 위원장은 한국의 비정규직 수준은 비정상적이다, 그것을 56%로 치든 36~37%로 치든 선진국의 10% 안팎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 여기서 어떻게 충성심을 얻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애

기하고 이번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대법원에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성과 위장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을 하지 말고 이제 중소기업들에게서 100명까지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비정규직은 더 양산될 것인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이랜드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충분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객관적 통계에 의한다면 비정규직이 법 시행 이후에 확대되거나 양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판례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용인기업에 대한 위장 하청의 문제입니다만, 과거에도 대법원의 판례가 2002년이나 2003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부에서는 그런 위장적인, 말하자면 남용된 도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KTX 승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된 부분들은 다 동일한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그 회사마다 분류의 발생원인이나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저희 노동부로서는 부분 하나 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작년 제작년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비정규직 직무교육 참여율이 3%대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반 직장인들의 98%에 비해서 앞으로의 발전의 기회가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문국현 의원 비정규직의 직무교육 참여율이 3% 미만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의 경우에 근로자들이 사실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직무교육 부분을 특히 보완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규직에 대해서 80%를 지원한다면 저희들은 직무과정에서 100%를 지원하고 외국어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좀 강화해서 특히 비정규직으로부터 스스로 직업능력을 강화해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고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문국현 의원 다음에는 지식경제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문국현 의원 중소기업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으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20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중소기업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부와 같은 조직 설치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정책기조하에 올바른, 그리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초가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프렌들리이며, 생산 고용 등에 있어서 중요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창업과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국현 의원 지식경제부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빨리 이 중소기업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를 재벌 프렌들리 부서라고 하거든요.

납품단가 연동제를 즉시 반영해야 될 텐데 왜 못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사실 의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정부의 개입에 따른 사적 자치영역 침해 등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원칙과 맞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통해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은 지키면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정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참여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충들을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모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없어지고 오히려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식경제부도 중소기업부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환헤지 피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저희들도 아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헤지 손실은 KIKO 옵션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주 대부분이고, 금감원 추정에 의하면 약 2조 500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손실은 은행들이 부정확한 환율 전망을 근거로 한 과도한 판촉행위에도 비롯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들이 환 위험회피 목적을 벗어나서 투기적 목적으로 상품을 과다 구입한 데 따른 것에도 또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여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중소기업에 KIKO를 판매할 때 과도한, 또는 해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의원** 이것은 인재의 성격도 큼니다. 환율을 조작한 혐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탕감에 대한 요청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탕감은 과도한 것이고, 아마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의원** 지금 중소기업들은 공공구매지원제도, 또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완화 등과 중

소기업 범위의 선진국형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중소기업의 범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도 너무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이 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에 제출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지금 일본은 2050년까지 50% 에너지 감축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5050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도 20% 이상 당장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선언하지 못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 세이빙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의원** 반드시 녹색경제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문국현 의원** 고맙습니다.

70년대, 80년대식 재벌 만능주의로는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직도 재벌 규제 완화에 올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는 재벌편향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중소기업 살리기를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선언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99%와 고용 인력의 88%인 2000만 명의 고용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여성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선언하고 실천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교훈으로 삼아 눈 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닌 정책 전반에 대한 냉정한 자기 성찰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성을 통해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수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다독이는 정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 책임질 줄 아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윤성 문국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一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유가로 인해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침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한껏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일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고생 많으시지요? 장관께서도 좀 전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본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현재 고유가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의 물가는 과거 10년 내에 이렇게 오른 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는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 그것은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서 현재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오전에도 제시된 숫자입니다만 국민 고통 지수가 8.6이라고 합니다.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서민생활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허리가 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물가상승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5% 중에 절반은 국제유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현재 통계상 50% 가까이 원유가 상승, 그거와 관련되는 공업제품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런데요, 이와 같은 고물가의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 또 무리한 환율정책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의 여건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 내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우선 성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사실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정과 성장은 전후관계, 서로 상호 필수적인 이중관계에 있는 것이지 성장과 그다음에 안정이라는 것은 서로 상치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다음에는 지금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적어도 경제정책은, 현재의 정책이, 우리 10조 원의 민생안정대책도 사실은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가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경제효과들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

운 상황, 소위 이런 점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판단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사실 경제정책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도 본 의원은 동의를 하고 또 사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외부의 여건이 아주 주원인이다, 또 지난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한, 그 중에서 특히 투자 부진에 의한 성장 잠재력 훼손이 사실 이 어려움의 원인 중의 하나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좀 왔다 갔다 했다 하는 데 대한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연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제가 오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좀더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하도 많은 분들이 장관 거취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서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물러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막중한 각오로 꼭 서민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선 52개 품목 물가관리 문제는 이미 우리 존경하는 배영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물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율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7월 2일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환율수준에 대해서는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쓴 것도 아니고 저환율정책을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柳一鎬 議員**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책에서 보면—장관님 저서 말씀입니

다—또 그리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또 스스로 환율주권론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시는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정부가 고환율정책 쓴 것도 저환율정책도 쓴 것이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는 주요국의 환율 동향에 따라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정 부분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서 환율주권론을 이야기한 것은 제가 책에서 옛날에 1985년 소위 플라자합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하루아침에 1달러당 250엔을 150엔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시장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를, 자기 경제의 대외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부의 역할이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 책에 써놓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필요할 때는 정부는 언제나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나라경제의 대외균형을 위해서 가장 핵심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마침 또 제가 취임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또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서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柳一鎬 議員** 사실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은, 이른바 시그널은 아, 환율에 상당히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7월 7일날 장관님 잘 아시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라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크게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개입에 대한 의지는 적어도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관련된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장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외환을 매도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

유액을 매도할 것이다”,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7월 9일 환율이 전일종가 1032원 70전에 비해서 무려 28원 가까이 급락한 1004원 90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선언하고 외환보유액을 팔아서라도 환율상승을 억제하겠다, 이런 개입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이 상당히 저도 이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도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은 17년 내에 지금 4.8%, 5%의 물가상승에 미국이 육박하고 있는데 17년 만에 최고의 물가 수준이고 유럽도 16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환율시장의 특정한 부분에 쏠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외환 관계당국이 협의를 해서 이런 이례적인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조치, 또 확실하고 단호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하에서 7월 7일 날 발표가 나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의 기초 여건,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그다음에 주요국의 환율 동향,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외환시장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는 제가 정부 들어오기 전이나, 정부 들어오고 나서나,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柳一鎬 議員 그러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장관께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발표 이후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환율 안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와 같은 개입의 필요성이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수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정부가 환율 수준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면 2004년 28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시작이 되어서 올해는 100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이 될 사정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올 8월 달에는 순채무국, 이제 우리의 재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은 나라로 전환할 이런 상황이라는 데에

서 결국 환율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것은 누구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쪽에서 움직여 왔고, 또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올린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환율에서 그 방향은 맞은 것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120달러, 110달러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방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 만약 그것이 또 정책으로 얘기한다면 거꾸로 저환율정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정부에서는 저환율정책도 고환율정책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이 믿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께 많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외환시장에 대한 그런 직접 개입보다는 역시 통화신용정책, 그 중에서 금리정책을 더 중심에 두는 것이 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인위적인 개입을 자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것은 모두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현재 일자리수 증가가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14만 7000개, 6월 중입니다.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청년층 고용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정말 막막한 현실입니다.

7월 17일 날 ‘고용대책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이 대책에 의해서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새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은 3%대로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100만이 넘는, 사실상 청년으로서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특히 더 중요하고, 또 특히 올해 들어와서 계속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지난달에 일자리는 14만 7000개, 원래 상반기 평균이 한 19만여 자리인데 그보다 아주, 물론 통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15만 이하로 떨어진 것은 하나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한 가지 새로운 구상은, 나머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구상은 지금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경제가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또 전문기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헛수고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잡 트레이닝(Job training)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제대로 돌아오고 이제 일자리가 생길 때에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이러한 잡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때에 경제 성장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종래 하던 것 이외에 추가로 하나 할 계획이고, 또 어차피 1년여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힘들기 때문에 10만 해외 인턴제 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의 역량 확충을 위한 그런 데에 힘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지금 7월 중에 발표된다는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의 내용도 아마 그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성장잠재

력을 키워야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서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통한 비효율의 제거,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동의합니다.

○**柳一鎬 議員** 그런데 요즘 폭력·불법 시위에 단골로 등장하는 구호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들어보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柳一鎬 議員**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폭력·불법 시위에 나오는 구호, 저는 이것이 국민의 뜻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야말로 일부 이익집단의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소문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유야무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은 아니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유 의원님은 요 근래에 소문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는 요 근래에 저와 관련되는 소문,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소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때는 저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당 노조와도 협의를 하고 또 공기업 민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이 혁신도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의 방에 와서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또 저도 신중히 처리할뿐더러 앞으로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꼭 협의를 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정부가 불법 촛불시위에 따라서 후퇴했다든지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본 의원의 노파심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장관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아주 굳게 믿겠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의 개혁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함

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유가 대책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승용차 홀짝제 등 몇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단기 대책 위주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장기 대책의 특별한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홀짝제를 왜, 그렇게 빨리 시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에너지 절약적 구조로 전환해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도 거의 물가도, 원래 일본 물가는 마이너스 경우도 있었습니다. 1.3%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오히려 1월~5월까지 에너지 소비가 4.2%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나왔고 그다음에 더 구조적인 정책으로서는 에너지 절약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큰 세 가지 줄기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구조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올려주고 또 앞으로 건물 계획도 우리나라 건물과 같이 에너지에 대한 관념이 낭비적인 그런 설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설계도 외국과 같이 층고도 낮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특히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개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에너지, 현재 우리 에너지 자급률이, 자주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외교, 특히 총리께서 중심이 되어서 가지고 이 에너지 자원 외교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감세, 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현재의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정부가 먼저 국민을 믿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 신뢰 회복이 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유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십시오.

왜 질문이 계속되는데 마이크가 꺼졌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 진행은 정확합니다. 시간이 1초라도 오버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박은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군부 독재가 지배하던 1980년대에는 장애인 복지도 형식적이어서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신체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에서 탈락되는 장애 차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배 국회의원들이 민주화와 인권 확대

에 대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장애인, 여성, 고령자도 지금은 별다른 불편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회 문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서면 아직도 곳곳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턱들이 넘치고 있어 저 스스로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가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수 의원 물가 폭등은 따라서 단순히 경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의 극복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총리, 지난 7월 21일 오전 경제와 경영학계 원로·소장학자 118명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이제는 강만수 장관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박은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신임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 다시 경질을 건의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경제 전문가들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환경에서는 안정 중심으로 위기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에도 강 장관은 유독 인위적 환율 상승을 통한 수출 증대를 주장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인위적이라기보다는 환율 상승은 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경제 기초 여건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면 환율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성장보다 물

가가 중요하다며 보유 외환을 풀어서라도 환율을 끌어내리겠다고 경제정책 기초를 민생과 물가 안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경제팀의 교체 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경제 여건이 바뀌어지면 경제정책자들은 그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바꿈으로써 바뀌어진 경제 여건에 대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수 의원 지난 7월 7일 개각 때도 청와대 내부에서까지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데도 대통령만 유임을 고집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은수 의원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강 장관을 유임시켰다는데 현재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성장 위주에서 안정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경제팀은 바뀌지 않았지만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게다가 7월 7일 문책 개각에서는 최중경 차관을 대신 경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리 경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차관은 차관대로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박은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수 의원 이렇게 대신 경질이 되고 인격에 까지 상처를 입게 된다면 앞으로 정부를 위해 충성을 바칠 공무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최중경 전 차관은 굉장히 훌륭한 공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훌륭한 공직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공직사회 사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수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만하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박은수 의원님의 그 이야기를 더 일을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최차관이 바로 옆에서 보좌하던 분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질의 이유로 언급한 최 차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인사 문제를 제가 또 100%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은수 의원** 이렇게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뭔가 비리 연루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최 차관 경질에 관한 여러 건의가 있었고 또 그러한 몇 가지 사유를 이미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장관의 취임 초기에는 물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하반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에 주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제가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경상수지를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는, 3월로 기억합니다마는 '2004년도 280억 달러가 넘는 흑자에서 올해는 100억 달러 전후의 적자로 전환되는 엄청난 변화가 되는 상태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외 균형 즉 대외 수지가 균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의 경상수지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박은수 의원** 경제는 심리인데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신뢰를 잃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런데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강 장관께서는 7월 9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 칼럼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이 계속 버티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언론의 생각을 박 의원님께서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또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러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아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은 공동모금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민간 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법을 제정했고요, 98년부터 저희 보건복지부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 46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했고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도의 기획과 지원을 저희 복지부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우리는 1970년대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아름다운 기부 의지를 모으며 참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성금의 모금과 배분에 대하여는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이것이 정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 대한 시정명령 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복지부는 한 번도 모금회의 장이나 임원의 임명·해임에 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서 시정 명령 및 지도 권한 그리고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런데 왜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지난 총선 이후인 4월 10일 그리고 4월 14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모금회 회장단을 면담하면서 현 신필균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사퇴를 요구한 바는 없고요, 다만 공동모금회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을 처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또 공동모금 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연구사업이나 위원들의 연수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성이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을 부적절하게 배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모금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저희가 시급하고 또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차관, 차관은 지난 6월 19일 서울시 여성위원회 제1기 위원모임에 참여하신 바 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범 여성계의 사적인 모임이어서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 자리에서는 차관이 직접 신필균 사무총장에게 사퇴 촉구를 하였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신필균 사무총장을 한 2, 3분 조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 사적 모임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럼 신필균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제가요?

○박은수 의원 예.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수 의원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

습니다.

차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초대 원장을 공모 절차에 따라 뽑기로 결정한 바 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이것은 저희가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개발원이 신규 개원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사·연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의 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이라든지 하는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접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이사회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여러 장애인 전문가들로 같이 구성되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런데 차관은 면접심사 이전에 차관이 직접 추천위원 중 일부 위원에게 전화를 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는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지금 장애인개발원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계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차관이 특정한 이용홍 씨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은수 의원 추천위원 중에 변승일 농아인협회장은 영상전화기를 통해, 그리고 권인희 시각장애인협회장은 유선을 통해 차관이 직접 이용홍 씨를 원장으로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두 회장님하고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리고 6월 27일 면접에서 유일하게 비장애인 후보였던 이용홍 씨가 다른 장애인 후보 4명을 이기고 1순위로 낙점되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지금 현재 낙점된 게 아니고요. 저번에 두 분,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현재 두 명이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용홍 씨입니다.

○**박은수 의원** 이용홍 씨는 전 복지부에서 정책 홍보관리실장을 역임한 사람이 맞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박은수 의원** 그런데 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권인희 시각장애인협회장은 차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7월 1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지금 그 단식농성을 했던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입장을 표현하시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변 회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박은수 의원**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14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실신하여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예, 제가 직접 만나고 면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박은수 의원** 차관은 이 두 분의 심사위원회에 면접심사 이전에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다른 임원 추천위원회에게도 전화하신 바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전화한 적 없습니다.

(「고물가·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은수 의원** 차관, 제가 볼 때는 개발원 인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사에 의해 채용모하실 뜻은 없으신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봉화** 이번 개발원 원장 임용 절차는 저희가 순수하게 이사회에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선정 과정이 남아 있고 또 그동안의 과정도 7명의 추천위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했던 그 절차가 불법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최종 결정은 장애인개발원 이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개발원이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

습니다.

○**박은수 의원** 공직에 대한 도전의 기회는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정자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제도가 각본처럼 진행된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총리께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은수 의원** 그 내용 가운데에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에 4층 이하는 운행금지, 5층 이상은 6층 운행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은수 의원** 이 경우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그렇고 또 홀썩제도의 경우 보육원에 아기를 맡겨야 되는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그러나 7월 6일자 총리의 특별지시문 문항 속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시를 하달할 때에도 한 쪽 방향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소수 약자의 처지도 깊이 검토하여 특별지시문 하나를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총리께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은수 의원** 장애인 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오전 질문답변에서 내년도 예산의 10% 삭감을 언급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 예산은 예외인가요, 예외가 아닌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 10% 삭감은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장애인 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마당인데 다른 경상비 예산과 동일한 차원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부자와 기득권 편만을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같은 소수 약자의 입장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섬김의 대상은 부자나 재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같은 어려운 계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무시당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도전의 기회는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할 것인데 이미 내정자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제도가 각본처럼 진행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직을 걸고서라도 고언을 마다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박 의원님의 충언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박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안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3000년의 농업 혁명, 300년의 산업화 혁명, 30년의 정보화 혁명을 거쳐 이제 인류는 3년 단위로 혁신의 시대를 일구어 내는 소위 인류문명 4물결, 과학·기술·두뇌·혁명의 시

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민은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새로운 한국의 미래와 국민의 꿈을 얘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최고의 민생대책은 미래를 희망으로 일구어 내는 것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역동적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범 5개월의 이명박 정부와 18대 의회는 이러한 꿈과 희망의 미래 좌표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이종혁 의원 6, 70년대 개발연대 시기에 20대 청년이 10년 단기에 세계 톱10 기업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장담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체제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 투입의 양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 기업 육성 금융시스템도 부재했기 때문에 어려웠으리라 생각하고 6, 70년대에는 MS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탄생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종혁 의원 그러면 2008년 현재 이것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휴렛패커드, 구글, 시스코 등의 신생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신화로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개발연대의 지도자가 20년 내에 한국을 세계 최고 선진경제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국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은 가능했겠습니까,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경제개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여러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고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선진경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연대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형·혁신형 경제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약속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불가능이 오늘에 가능한 이유는 국가의 부와 미래는 혁신적 기술 보유 여부에 좌우가 되고, 하버드 중퇴생 빌 게이츠, 스탠퍼드공대의 브린, 래리 페이지 이런 떠꺼머리총각들이 10년 이내에 세계 넘버 원 기업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떤 국가가 이 같은 혁신적인 지식두뇌로 첨단산업을 일군다면 20년 안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관,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동의합니다.

○이종혁 의원 과학기술기반의 혁신경제·지식경제 시대의 문명전환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장관의 시대인식을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21세기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창의성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창조적 기술혁신과 창의적 인력 양성 등을 국가핵심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의 성장전략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혁 의원 그렇다면 국가전략상 지금 현재의 정부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미래 신성장산업군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저희들이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전략상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장동력 산업군을 저희들은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과 기후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에너지환경산업 분야, 즉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 개발 그린IT 바이오연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 좋은 고용창출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금융, 의료서비스 선진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른 신산업 분야입니다. 바이오와 의료의 융합을 통한 신약개발이나 신개념 진단 시료·기기 등이 되겠습

니다.

네 번째 분야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분야로서 기존 주력산업과 IT산업을 결합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민간 중심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지난 6월 말 1차로 63개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진정한 성장동력으로서의 후보를 선정해서 9월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종혁 의원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산업, 항노화 기술을 우리가 보유해서 전세계 은퇴인류의 지갑을 열게 해서 우리나라에 모이게 합니다. 신약 부문에 미국의 화이자 리피토, 한 개 단일품목으로 2007년도 13조 50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0년 세계 바이오시장 약 3000조 시장입니다.

신에너지산업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핵융합발전 상용화 시 우리가 성공하면, 초고온 플라즈마 0.03초 우리 국내기술로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상용발전설비로 성공을 시킨다면, 극동아시아 지역 2조 달러 시장입니다. 수소에너지.

나노신소재산업, 원자 단위로 쪼개서 신이 만든 창조물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신성장산업을 우리가 선점해서 MS 같은 기업을 서너 개 키우고, 만약에 열 개를 이런 기업을 키운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5, 6만 불 선진경제강국시대로 들어간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지식경제부는 동원 가능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이런 산업과 과학두뇌 육성을 위한, 우수두뇌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은 정교한니까? 국가재정 투입은 충분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지식경제부가 주력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종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발굴 그리고 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투자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시스템 확대, R&D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해

외자원 개발과 기후변화대응전략 등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인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의 중요성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할 때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가재정 투입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이 부분의 유망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지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정부가 시대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좀 더 더 예리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저희들이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혜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주로 기술 개발과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저희들이 겨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의원 일자리 창출 문제가 우수 중소기업을 키워 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중소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2, 30년 동안 의회와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해 오는 대일무역 역조 현상,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키우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저희들은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부품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품 소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국현 의원님께서 공교육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기술집약형 우수 중소기업을 키워 내면 공교육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교육 문제는 입시 제도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절대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면 이 공교육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우수 중소기업이 육성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인력 개발 체제가 웬만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과 우수 인력의 육성 문제는 궤를 같이하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습니다.

산업혁명 도래를 예견하고 대처한 민족, 그렇지 못한 민족, 그 운명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한 민족들이 그 이후의 현대사와 또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그랬고, 그렇지 못한 인도라든가 중국이나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종혁 의원 우리 일제 36년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 우리 당대의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새롭게 밀어닥칠 과학기술혁명 시대, 이명박 정부 준비는 철저히 마련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를 지금 교육부와 합쳐 놓았지만,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과학기술특보를 임명을 해서 과학에 대한 애정을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이종혁 의원 미래에 대한 우리 준비, 총리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부 통폐합, 이공계 인력 대학지원 감소, 이명박 정부 이공계 출신 체로내 각입니다.

논문인용지수 국내 유력 일간지 며칠 전 1면 톱기사입니다, 미국 수천 명 4029명, 우리나라 3명입니다.

R&D 투자현황 우리나라가 미국의 10분의 1, 중·일에 비해서 5분의 1, 4분의 1입니다.

블록버스터 제약품 한번 볼까요. 리피토 13조 500억, 1년 동안 매출 올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동아제약 1200억, 그것도 박카스입니다.

특히, 미국 31% 우리 한국 6%.

미래국가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이노베이트 아메리카(Innovate America), 중국 과학흥무(科技興貿), 일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한국 됩니까? 좇불시워 입국입니까?

총리,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과학기술은 일국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종혁 의원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1960년대 이후에 KIST 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우리도 과학입국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와 같은 결과로 여러 분야에서 산업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 정보산업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가는 이와 같은 업적을 세웠는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아까 지식경제부장관이 얘기한 신성장산업을 저희들이 일으켜 나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굉장한 서광이 비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혁 의원 총리,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을 개조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런 분야에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정부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실용정부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의 투입이 과거보다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활로를 장기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철학과 기조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특히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R&D 투자를 현재의 3.2%에서 GDP의 5%로 올리겠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고, 또 정부재정도 이와 같이 함께 올릴 것

이고 또 민간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재보다도 거의 배 가깝게 확대를 해서 GDP의 5%까지 R&D 투자를 올려서 신성장산업 동력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차세대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R&D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이종혁 의원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추경 10조 5000억을 편성해서 1380만 명에게 6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그것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민에게는 한 달 대중교통비의 50%, 반을 대주는 것은 적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미국도 이번에 이러한 택스 리베이트(Tax Rebate)제도를 실시했는데 적게는 300달러, 많게는 1200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300달러가 대충 30만 원 전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국 경제력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뭐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고유가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제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EU국가들, IMF에서 권고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코스트 푸시(cost push),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가격으로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세금을 낮추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은 경제 체질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극복을 더…… 또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투기세력들한테도 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코스트는 코스트대로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를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모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이번에 추경을 낸 것도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떤 경기부양을 위해서 적자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민간부문에서 10조 4000억이라는 그런, 너무나 과대하게 세금을 받아 가지고 민간을 위축시킨 부분을 이번에 되돌려 줘서 어떤 점에서는 중립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은 못 시켜도 적어도 민간경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 그래서 두 번째 대원칙에 대해서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10조 원 대책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워지고 특정 산업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텍스 리베이트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화물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특정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원칙 또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이지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기초로 해서 이 10조 원의 민생대책이 구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아니, 3조를 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 이게 최선의 민생대책이나…… 그리고 지금 자꾸 포퓰리즘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한 달 교통요금의 50%를 대 준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에게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장관님, 부스럼이 나면 긁어주는 게 그게 대책이 아닙니다. 기초체력을 보강해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부스럼이 낫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정부의 재정 집행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충하는 그러한 미래 준비에 투자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또 이번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서민 물가가 올라가고 내수 부진되고 기업 도산해서 한국경제 벼랑 추락하고 고유가, 원자재로 중소기업 도산하고 벼랑에 떨어지고, 이거 상상하기 싫은 두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장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현재 중소기업 도산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정책,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또 벤처기업에 대한,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 지원대책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1998년도에 소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붐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유엔기후변화협약을 2013년부터는 우리가 피

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배출 문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IT에 맞먹는 그런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앞으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좀 운용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총리께 다시 한번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3년 가뭄에 기근이 들면 현명한 가장은 똑똑한 아들을 발일에 투입 안 시키고 서당에 보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미래성장산업의 국가 최고전략기관이 되어서 모든 국력과 통치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과거 수출을 챙길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신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KIST를 만들고 또 과학기술처를 만들고 해외로부터 후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을 많이 불러다가 사실은 한국경제를 호도(好道)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일어났고 그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이 일어났고 지금 그 덕을 통해서 지금 정보화 경제, 정보화 사회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 좀더 강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이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에 관한 한은 이런 미래에 좀 전념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과학 두뇌를 길러야 됩니다. 세계적 기술 영재를 키워야 됩니다.

과거의 한강 기적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5대 주력산업을 키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는 최빈국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지도자의 시대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총리, 분명하게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들이 먹고사는 기초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8대 국회의원 여러분!

미래의 전략이 중요한 국가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갈라낼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통찰력을 가지고 과학 두뇌와 기술 영재를 키워내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가 우리 18대 의회에 두는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 중차대하기에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18대 국회 4년 동안 여야가 일체의 소모적 정쟁을 중지하고 미래를 위한 최고의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상생과 생산과 효율성의 의회가 됩시다. 국민성공시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를 우리 18대 의회가 차라리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리하여 18대 의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거대한 인류문명 변환의 시대를 가장 슬기롭게 대처한 의회로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한국을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첨단산업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케 하는 그 기틀을 쌓은 의회로 역사에 기록되게 합시다.

18대 국회가 냉소와 폄하로 대접 받아 온 기존의 한국 정치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으로 되돌리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정치유산을 다음의 정치 세대에 물려줍시다.

이천년 민족비서 천부경에는 한반도가 미래의 세계 중심이 된다는 가슴 뛰는 예언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혁신적 과학기술로 한국의 부를 일구고 그러한 우리의 기술로 인류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흥익인간의 이념을 몸소 실천하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됩시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우리 18대 의회가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서면답변서】

○국무총리 **한승수**

(변웅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날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6.16)과 동시에 정부의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6.19일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내용은,

- 대지급금 지급수준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사정금액 전액으로 하고,

-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총 사정액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보상한도액(3216억 원)의 차액 전액으로 하였으며,

- 국가 및 지자체의 방제비용 등을 주민 보상액보다 후순위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청구하기로 결정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의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지?

○'07.12.7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07.12.11일 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74억 원을 재해대책비로 해경에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7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충남 60억 원, 전남 15억 원)에 지원하였음.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생계안정자금 1172억 원(충남 994억 원, 전남 178억 원)을 지원하였고, '08.7월부터 200억 원 규모의 공

공근로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감면과 납기 연장,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경감, 학생 교육활동비 20억원(충남교육청) 지원 등과 함께,

-농협과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127억 원 융자, 이미 대출된 545억 원의 납부기한 연장 등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요청 사업(271건 : 충남 183건, 전남 62건, 전북 26건)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 조사액이 얼마인지?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관련 체계는 피해자와 배/보상의무자(선주측 보험회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이의 민사관계이며

-대부분의 유류오염사고는 국제유류오염보상 체계에 따라 배/보상 의무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프레스티지호 사고(02년)의 경우 스페인 정부가 피해일부를 사정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스페인 정부의 사정액을 인정하지 않아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의 정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는 사고 직후 보상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신고 및 보상청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액 산정이 정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29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 「피해보상 청구센터(1.22)」 및 「관광클레임조사사무소(5.19)」개소 독려 등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관계자 면담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집행위원회(3.10~14, 6.23~27)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이고 조속한 사정을 촉구하여 왔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6월 집행위원회(6.23~6.27, 런던)에서 총 피해규모를 최소 5385억원~최대 57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출석 의원(2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광정숙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두환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제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달곤 이명규
 이명수 이무영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회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두 성	임 영 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여 옥
진 재 희	진 현 희	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문 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옥 철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추 미 애
한 선 교	허 범 도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장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5인)

배 은 희	양 정 례	이 애 주	이 혜 훈
조 경 태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강 만 수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춘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노동부장관	이 영 희
국토해양부장관	정 중 환

○출석 정부위원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 형 식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 영 호
농림수산식품부제2차관	박 덕 배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 봉 화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도 재 문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신영수 · 김을동 · 김정훈 · 신상진 · 최옥철 · 안상수 · 이한성 · 홍장표 · 김충조 · 양정례 · 이진삼 · 강석호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1 정부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성순 · 강창일 · 최인기 · 김충조 · 김종률 · 신낙균 · 원희목 · 박상돈 · 김희철 · 김춘진 · 안규백 · 정장선 · 노영민 · 주승용 · 이낙연 · 조정식 · 강명순 · 김우남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기현 · 구본철 · 이한성 · 홍장표 · 유기준 · 유성엽 · 황영철 · 김정권 · 안상수 · 유정현 · 김소남 · 정양석 · 김충조 · 현기환 · 이명수 · 박종희 · 나경원 · 박대해 · 정하균 · 이진삼 · 신학용 · 이정선 · 양정례 · 황우여 · 송광호 · 이화수 · 이해봉 · 박상돈 · 정해결 · 배은희 · 이혜훈 · 허원제 · 조정식 · 박보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안상수 · 김정권 · 강창일 · 김동철 · 송민순 · 고승덕 · 김우남 · 송영선 · 이진삼 · 김소남 · 조진형 · 양정례 · 박종희 · 김성희 · 정영희 · 이혜훈 · 정양석 · 이화수 · 최옥철 · 임동규 · 유정현 · 박대해 · 김성곤 · 박준선 · 구본철 · 이정선 · 이한성 · 현기환 · 김부겸 · 김충조 · 진성호 · 김성태 · 김충환 · 이인기 · 최인기 · 신영수 · 나경원 · 김재윤 · 안효대 · 배은희 · 박보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본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결 · 윤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박상돈 · 김성순 · 김종률 · 김희철 · 박대해 · 박선영 · 손범규 · 오제세 · 유성엽 · 이명수 · 주승용 의원 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윤두환 · 김춘진 · 임두성 · 이윤성 ·

노철래 · 이한성 · 홍장표 · 김재경 · 김성조 · 정희수 · 신학용 · 유성엽 · 이진삼 · 황우여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허천 · 손범규 · 김태원 · 조전혁 · 박보환 · 신상진 · 윤석용 · 강석호 · 윤두환 · 주승용 의원 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노철래 · 김을동 · 김태환 · 박대해 · 서청원 · 양정례 · 윤두환 · 정갑윤 · 정영희 · 정하균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종률 · 강창일 · 김우남 · 김성곤 · 김성순 · 김충조 · 박대해 · 안효대 · 유성엽 · 이한성 · 이혜훈 · 임두성 · 조정식 · 최인기 · 홍장표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종률 · 강창일 · 김성순 · 김우남 · 김세연 · 김진표 · 김충조 · 박종희 · 유성엽 · 이낙연 · 이진삼 · 이한성 · 이혜훈 · 임두성 · 전혜숙 · 조정식 · 최인기 · 최재성 · 홍장표 의원 발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종률 · 강창일 · 김우남 · 김성순 · 김재균 · 김진표 · 김충조 · 이진삼 · 이한성 · 임두성 · 조정식 · 최인기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동성 · 안홍준 · 김태원 · 박종희 · 홍장표 · 김춘진 · 송영선 · 양승조 · 신낙균 · 임동규 · 정갑윤 · 김동철 · 양정례 · 유정현 · 이한성 · 정하균 · 김영진 · 이진삼 · 강석호 · 정장선 · 이정선 · 최영희 · 최인기 · 김학송 · 서청원 · 김희철 · 홍정욱 · 김소남 · 김정훈 · 김성곤 · 백성운 · 박보환 · 안상수 · 손범규 · 오제세 · 이혜훈 · 장세환 · 심재철 · 배은희 · 김부겸 · 강성천 · 나성린 · 이해봉 · 정해걸 · 김효재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임두성 · 정희수 · 정해걸 · 김일윤 · 이주영 · 김소남 · 강창일 · 김종률 · 손숙미 ·

이성헌 의원 발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김종률 · 강창일 · 김성순 · 김우남 · 김재균 · 김진표 · 이낙연 · 이한성 · 임두성 · 조정식 · 최인기 · 홍장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임두성 · 정희수 · 정해걸 · 김일윤 · 이주영 · 김소남 · 강창일 · 김종률 · 손숙미 · 박대해 의원 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황진하 · 강석호 · 김성수 · 김옥이 · 김정권 · 김충환 · 나경원 · 박선영 · 박준선 · 손범규 · 안상수 · 안효대 · 양정례 · 유기준 · 유성엽 · 유정복 · 윤상현 · 이인기 · 이한성 · 전여옥 · 정갑윤 · 정하균 · 허원제 · 현기환 · 황우여 의원 발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임두성 · 정희수 · 정해걸 · 김일윤 · 이주영 · 김소남 · 강창일 · 김종률 · 손숙미 · 이성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전현희 · 고승덕 · 김영록 · 김우남 · 김재윤 · 김효석 · 문학진 · 문희상 · 박선숙 · 박주선 · 서갑원 · 이용섭 · 이윤석 · 이춘석 · 장광근 · 강성중 · 조영택 · 최인기 · 최철국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전현희 · 김상희 · 김영록 · 김우남 · 김재윤 · 문학진 · 문희상 · 박선숙 · 서갑원 · 이용섭 · 이윤석 · 이춘석 · 장광근 · 고승덕 · 조영택 · 최인기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전현희 · 최인기 · 최철국 · 최문순 · 이춘석 · 문학진 · 이용섭 · 김상희 · 이종걸 · 김우남 · 이윤석 · 서갑원 · 김영록 · 장광근 · 김재윤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전현희 · 최인기 · 최철국 · 최문순 · 이춘석 · 문학진 · 이용섭 · 김상희 · 이종걸 · 김우남 · 이윤석 · 서갑원 · 김영록 · 장광근 · 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2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한국도로공사의 목포-광양 고속도로 공사관련
민원처리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서**

(2008. 7. 16 유선호 의원 제출)

독도 매립과 관련한 질문서

(2008. 7. 16 심재철 의원 제출)

긴급현안질의 자료요구에 관한 질문서

(2008. 7. 17 백원우 의원 제출)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자료제출에 관한 질문서

(2008. 7. 18 이은재 의원 제출)

**사이버폭력, 외국인AIDS/HIV감염인 강제퇴거
현황,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질문서**

(2008. 7. 21 임두성 의원 제출)